

광주시, '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힘 모은다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경제계 등 76개 기관·단체 동참 상생카드 특별할인·재정 신속 집행 강 시장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

광주시와 지역 76개 기관·단체들이 '원팀'으로 뭉쳐, 위기의 광주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광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소비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키우는 경제대책에 나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12·3 계엄·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광주은행·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광주소상공인연합회·광주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지방조달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주시·자치구·의회·교육청 등 지방행정기관,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에서 22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주주의 회복 없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한 손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들고 양손잡이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 유능한 광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경제·금융계, 시의회,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광주를 대표하는 70여

개 기관은 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는 더 단단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는 더 따뜻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광주경제가 착착착 풀려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소비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키우는 3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 민생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확대, 소비촉진 캠페인,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지원,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통해 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실업을 상습을 방지하

고 사업 운영을 안정시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과 기술 기반 산업 성장을 강화하며, 공공일자리 확대·취약계층 처우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과 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앞장선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태수 ㈜디에이치오 토웨어 대표,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순석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본부 회장 등 8개 경제단체·기관·기업 대표가 영상을 통해 각 기관별 민생경제 지원사업과 역할 등 실천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 등 금융기

관 8곳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광주시와 은행들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이어 김근태 광주경영자총협회 선임매니저와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소비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상생 결의서를 낭독하고, 16개 기관·단체 대표가 결의서에 서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 참석자들은 행사 종료 후 45개 골목상권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민생경제 위기 극복 예산 9800억 투입

소비촉진·기회확대 등 97개 사업 시민부담 경감·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주시는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신규 12개, 확대 38개, 지속 47개 등 총 97개 사업 추진에 9800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소비 촉진', '부담 경감', '기회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삼아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한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 방문의 해 운영 △착한소비 캠페인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 △광주공공배달앱 확대 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소비의 그릇을 키우는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1800만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문화·예술·스포츠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또 신속집행 대상 6조8253억원의 63%

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중 집행, 소비를 촉진해 경기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비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2월까지 연장한다.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담 경감' 정책으로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G-패스) △출생가정 축하 광주상생카드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지원 △광주 다음 통합돌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및 이자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G-패스사업은 대중교통비 어린이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자보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출생가정(6000명 대상)에는 출생축하금 200만원과 함께 출생아 1인당 상생카드 50만원을 지원해 출생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800개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 자금난 해소를 도

울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관광업계 경영안정을 위해 50억원을 관광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구조조도 화자금, 수출진흥자금 등을 대폭 늘려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월 개관하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110개사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과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창업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약 9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핵심 국도·국지도 사업 국가계획 반영

총 20개 사업 3조3000억 규모 500억 이상 사업 예타대상 선정

전남도는 도로 분야 국가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국토교통부(안)에 20개 사업, 3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하는 국가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부터 시·도별 수요조사, 대상지 사전검토,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흥~봉래 확장(31.7km·5142억원) △여수 돌산 신복~우두 확장(14.6km·4832억원) △장흥 대덕 신리~순지 확장(24.8km·4274억원)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신설(7.8km·4099억원) △강진 마량~군동 확장(20.4km·2119억원) △화순 도암~춘양 신설(2.8km·1509억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4.6km·977억원) △무안 현경 송정~마산 확장(7.6km·70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됐다. 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이 확정·고시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개별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국가계획 확정 이전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통과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전남 곳곳을 잇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는 완도와 고흥의 섬과 섬을 잇는 사업으로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 이후 첫 단추를 꿴 것으로 섬 주민 교통기본권 확보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돌산 신복~우두 4차로 확장, 순천 해룡국도대체우회도로, 무안 현경 송정~마산 4차로 확장 등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도지사 여수 수산시장 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 물가 점검 및 물품을 구매하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

전남도 제공

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버스·택시기사 등 1만1297명 1인당 30만원 총 35억원 규모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1만129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35억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어려운 운수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외버스 1038명, 시내·농어촌버스 2227명, 전세버스 1908명, 개인 택시 3723명, 법인택시 2401명이다.

전남도는 지원금이 설 명절 전 지급되도록 신속한 행정을 추진했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시군에서 대상자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했으며, 22일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지급은 24일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당시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 정부재난지원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급했었다.

서영배 전남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이 승객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운수종사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운수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